

경제

통계청 '2006 가계수지 동향' 살펴보니

세금·공적 부담 늘고 소득분배는 '제자리'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은 전반적인 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 분배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소득 증가율이 전체 경제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고, 조세와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돌파 = 지난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에 비해 5.1% 증가한 306만9천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대를 돌파했다.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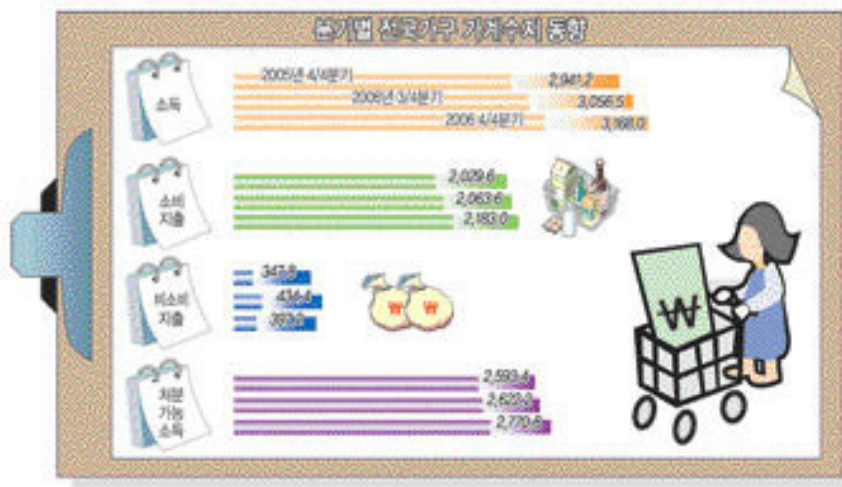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4년 6.0%에서 2005년 4.1%로 떨어졌다가 2006년 5.1%로 다소 확대했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2005년 4·4분기에 비해 7.7% 늘어난 316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191만7천원)이 2005년에 비해 5.7% 늘어났고 사업소득(66만6천원)도 1.9% 증가했다. 재산소득(6만7천원)과 이전소득(24만원)은 각각 전년대비 4.4%, 6.7% 증가

했다. 또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5년에 비해 5.9% 증가한 34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금·공적지출 증가율 '경중' = 지난해 전국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212만 원으로 전년대비 4.2% 늘어난 가운데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지출이 2005년 7.5%에서 지난해 3.4%로 낮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와 조세를 비롯한 공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를 압박하는 주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비 증가율은 5.2%로 2005년(4.5%)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가구당 월평균 24만1천7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05년 가구당 7만4천100원이었던 조세부담이 8만7천100원으로 14.1%나 수직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 공시가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부과 기준도 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재산세 증가폭이 커진 점이 조세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는 '악화일로' = 2006년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참여정부의 분배개선에 대한 강

휴면예금 3,666억

빨리 찾아가세요

금감위, 공익기금 활용 방안 제출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3천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11월말 현재 청구권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3천525만건에 3천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1만401원으로, 1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전체의 47.6%(3천477만건)에 1천742억원을 차지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은 740계좌에 140억 원이었다.

2003년부터 3년간 연평균 1천177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환급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가동해 작년 11월까지 102억 원의 휴면예금을 돌려줬다.

은행들은 작년 12월1일부터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 은행에 활동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휴면예금을 활동 계좌로 이체시켜주고 있다.

금감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휴면예금을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년형 '보르도' LCD TV

삼성전자가 6일 발표한 '보르도' LCD TV 2007년형. 베젤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와인 잔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178도의 광시야각을 적용해 어느 방향에서도 TV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게 했으며, 명암비도 기존의 5천대 1에서 1만대 1로 100%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역대 연봉자 5만3,037명

2005년 기준...1년새 1만 1,904명이나 늘어

개인사업자는 8만 9,000명

지난 2005년 역대 연봉자에 해당하는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액연봉 근로자가 전년보다 28.9% 늘어난 5만3천37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8만 9천명으로 15% 가량 늘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짝퉁한 재미를 봤다.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5만3천37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904명(28.9%) 늘었다.

과표 구간별 인원을 보면 8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2만2천231명, 1억원 이상 2만2천626명, 2억원 이상 4천20명, 3억원 이상 2천531명, 5억원 이상 1천629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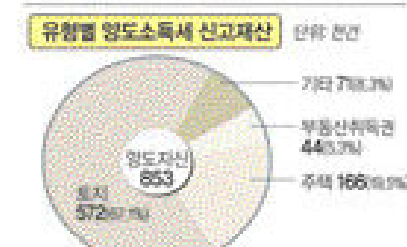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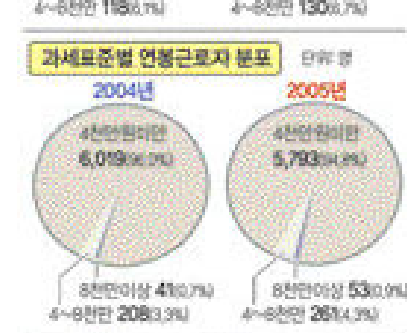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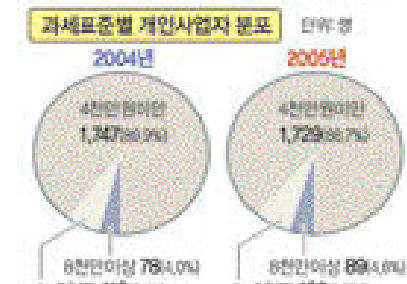
과표 8천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낸 근로세는 2조3천438억원으로 전체 근로세(9조7천782억원)의 24.0%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19.3%보다 4.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들 역대 연봉자가 2005년 신고한 근로소득 중 과세 대상 소득만 10조8천31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3천만 원대에 달했다. 전년 1억7천만 원대보다 35% 가량 증가한 셈이다. 역대 연봉자와 이들의 평균 소득은 불어났으나 부익부 속에서 양극화를 느끼는 근로자들이 있다.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중소세) 신고인원 227만9천497명 중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만9천 556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991명(15.5%) 늘었다.

자산가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해서도 재미를 봤다. 신고한 소득은 총 85만3천건으로 양도한 재산 유형별로는 토지 57만2천건(67.1%), 주택

국세통계연보 주요 통계



16만6천건(19.5%), 분양권을 비롯한 부동산 취득권 4만4천건(5.1%) 순이며 주식 등 기타는 7만1천건이었다.

지역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서울이 1건당 평균 1억916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4천927만원, 대전 4천622만원 등 순이며 전남은 91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

이구택 포스코 회장 연임 확정

추천위 단독 추천...23일 주총

이구택 포스코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회장은 이로써 2010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돼 박태준 명예회장을 통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던 정 회장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 회장은 사석에서 "2010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것을 2012년 유치로 만회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받고 있어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실 시된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보충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석만 사장, 정준양 부사장을 상임이사 후보로, 정경우 전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사외이사 후보로도 각각 확정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는 제프리 존슨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올랐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강신호 회장, 전경련 회장 연임 포기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6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됐으나 이후 불거진 아들의 경영권 분쟁, 전경련 운영에 불만을 품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전경련 부회장직 사퇴 등으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강 회장의 사퇴로 전경련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4대그룹은 물론 현 회장단 가운데 아무도 선뜻 이 자리를 맡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선동이 예상된다.

조 부회장이 이날 전경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기 회장직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출종제 출자한도 25%→40%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토공서 매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종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종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한 독립규제 및 공적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상향하는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출종제 적용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한도액을 초과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공정위는 조기간 출종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진흥원을 신설하고 진흥원 산하 공정거래분쟁조정회를 통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실형' 정몽구회장 대외활동 자제

슬로바키아공장 준공식 연기

여수 박람회 유치활동도 차질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이 비자금 사건으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회사 안팎에서 정 회장의 대외활동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현대차 고위관계자는 "황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회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당분간 대외활동은 자제하고 회사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국내의 현안을 청

겨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고위 관료를 만나거나 해외활동을 위해 자주 출국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장 3월초 열릴 예정인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식과 4월 현대차 체코 공장 착공식 행사가 연기되는 등 향후 해외 현지에서의 행사들이 불투명해졌다.

그들은 정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직접 두 행사에 각각 정상을 초청,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성대하게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예상밖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고문을 맡아 올해부터 해의 190개 영입망을 통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던 정 회장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 회장은 사석에서 "2010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것을 2012년 유치로 만회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